

2030년까지 지방 5곳 이상 ‘세계 100위권 창업도시’ 키운다

중기부, 창업도시 프로젝트 발표
대전·대구·광주·울산 업무협약
4대 과기원 중심 기술창업 거점 구축

AI·바이오 등 지역별 전략 가동
인재 발굴부터 투자·정착까지 연계
韓 “전국서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정부와 손잡고 2030년까지 세계 100위권내 창업도시 5곳 이상을 만든다. 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동참한다.

중기부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과 ‘창업도시 프로젝트’의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중기부는 한성숙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오후 대구 달성군 DGIST에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전략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는 지난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공개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계획’의 후속 행사로, 지역별 특성 및 강점을 반영한 창업 도시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다.



21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DGIST 컨벤션홀에서 열린 중기부·4대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왼쪽부터)유독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문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서남교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중기부의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인재 육성, 사업화, 투자, 인프라 같은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구·광주·대전·울산 4개 도시의 특화 전략을 더했다. 이를 통해 지방 주도의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4개 지역 과기원을 중심으로 대학·연구소·기업·투자기관이 협업하는 통합 거버넌스가 탄생하고 기술인재 양성부터 창업·성장·정착까지 이어지

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예정이다.

대구는 ‘인공지능(AI)·로봇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첨단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선도 도시 조성’에 집중한다. DGIST의 연구역량을 활용해 로봇·모빌리티, 의료·바이오, AI·소프트웨어 분야 중심의 딥테크 실증 기반(테스트베드)을 마련한다.

대전은 KAIST, 정부출연연구기관과 3대 분야(우주·방산, AI·로봇, 바이오)에 중점을 둔 딥테크 창업생태계를

만든다. 광주는 GIST의 연구 인력이 중심이 돼 미래모빌리티, 에너지, AI·반도체 분야 육성에 힘을 쏟는다. 인근 전남 나주시의 한국에너지공과대, 한국전력 등과 연계한 광역형 창업생태계도 구축한다.

울산의 경우 UNIST와 지역 주력대기업의 산업단지 기반을 이용한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지역 3대 주력 산업 현장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개방형 실증 특화 도시로 발전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4개 지방정부는 업무협약을 통해 과기원 중심의 기술 인재 발굴 뿐만 아니라 우수 스타트업의 지역 유입 촉진,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투자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한성숙 장관은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넘어 지방에서도 기술창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이 다시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젝트로 지방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자생적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LS에코에너지

통신케이블 UL 인증 美 데이터센터 정조준

LS에코에너지가 전력 케이블에 이어 데이터센터·스마트빌딩용 통신 케이블까지 미국 UL 인증을 확보하며 북미 데이터센터용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생산법인 LSCV의 통신 케이블이 미국 UL 화재 안전인증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증 제품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스마트빌딩의 출입 통제, CCTV, 경보장치 등에 적용되는 신호 전송 케이블이다. 북미 지역에서 스마트빌딩 구축과 보안 설비 투자가 늘면서 관련 통신 인프라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동양

부천 AI 허브 착공 인프라 사업 확대

유진그룹 계열 동양이 AI 특화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하며 AI 인프라 사업 확대에 나섰다.

동양은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부천삼정 AI 허브 센터’ 개발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양이 사업주체를 맡고 LG CNS와 디씨플랫폼이 파트너로 참여한다. 시공은 DL건설이 담당한다. 동양은 AI 데이터센터 개발의 핵심 축인 DBO(설계·구축·운영) 사업자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개발 기획부터 구축 관리, 운영 안정화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

대구·경북지역서 중소 혁신제품 발굴

공영홈쇼핑이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 혁신 제품 추가 발굴에 나섰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0일 대구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대구·경북 혁신기업 제품 코칭·상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43개 혁신기업이 참여했다.

‘코칭·상담회’는 유통 전문가가 지역을 직접 찾아 우수 상품을 발굴하고, 제품별 맞춤 상담을 실시하는 공영홈쇼핑의 대표 정책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해 전 지역에서 17회 개최하고 약 20억 원의 판로지원액을 기록했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기업별 전문가 상담, 품질 관리 교육, 정부 정책사업 소개 등이 진행됐다.

/김승호 기자

중기연 “하도급 대금 지급상한 60일서 30일로 줄여야”

중소 유동성 제고 보고서 발표
수·위탁 거래 평균 지급기간 27.4일
대기업 22.5일·중소 30.7일로 격차
“50년 전 결제기준, 현실과 괴리”

중소기업들의 현금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선 50년 넘게 ‘60일’로 묶여 있는 수·위탁거래 판매 대금 지급 기한 상한을 ‘30일’로 줄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좋아져 기업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하도급 대금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매 국회 때마다 다수 발의됐었지만 번번히 좌절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1일 내놓은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

기업 대금 지급 기한 단축방안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4년 전체 수·위탁 거래의 평균 판매 대금 지급 기간은 27.4일이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2.5일, 중견기업 28.3일, 중소기업 30.7일로 조사됐다.

중기연구원은 지난 50년간 유지되고 있는 수·위탁 판매 대금 지급기한(60일) 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정도, 대금 지급기간 분석, 해외사례, 효과성을 분석했다.

중기연구원은 “1975년 당시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서 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기업의 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납기를 60일 범위 안에서 최단 기간으로 한정했는데 지금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중소기

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제정 당시 결제 여건을 고려한 기한 설정임에도 존치되고 있어 법률과 현실이 동떨어진 적합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중기연구원은 그러면서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등의 사례도 언급했다. EU집행위원회는 기업 간 거래(B2B)의 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정한 지연 지급지침을 운영 중이다. 예외적으로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이때도 채권자에게 불공정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했다. 미국은 신속지급법(Prompt Payment Act)에 따라 공공계약의 경우 주계약자가 하도급 계약자에 대해 30일 내에 대금을 준다는 원칙을 세웠다. 소기업의 경우 이보다 짧은 15

일 이내 대금 지급을 목표로 한다.

연구원은 수·위탁 거래 대금지급 기한 단축이 산업 전반에서 순작용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금 지급 기한을 줄이는 것이 수급 사업자인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인 대기업 그리고 국가 차원의 편익 창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을 전체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도입해 유연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조주현 중기연구원장은 “중소기업이 자금 사정 악화에 직면한 이때 지난 50년간 고착화된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포스코그룹과 철강·이차전지 공급망 상생 강화

포스코·퓨처엠 등 계열사 동참
협력 중소기업 네트워크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포스코그룹과 손잡고 철강, 이차전지 공급망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중진공은 21일 포스코 포항 본사에서 포스코, 포스코퓨처엠, 엔투비, 포스코HY클림메탈과 함께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철강 및 이차전지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포스코 그룹 주요 계열사가 공동 참여해 수주 중소기업



21일 포스코 포항 본사에서 열린 중진공과 포스코 그룹 4개 계열사간 동반성장 네트워크 지원 협약식에서 (왼쪽부터)윤진수 엔투비 설비구매1실장, 이승기 포스코 설비자재구매실장,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 이종혁 포스코퓨처엠 구매계약실 설비자재구매그룹장, 박지윤 포스코HY클림 메탈 경영지원그룹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과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협력 중소기업

업 대상 동반성장 네트워크 지원 ▲산 우수기업 추천 및 정책사업 연계 ▲산업현장 정보교류 확대 ▲공급망 경쟁

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올해 사업 3년차인 동반성장 네트워크에는 현재 약 90개의 발주 기업이 참여하고 있지만 대기업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동시에 참여한 사례는 이번 협약이 처음이다. 앞으로도 중진공은 대기업 그룹 단위 참여를 확대해 수주 중소기업의 지원 범위를 넓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중진공 반정식 지역혁신이사는 “국내 철강·이차전지 산업을 이끄는 포스코그룹과 체결한 이번 협약은 대·중소 상생협력의 의미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동반성장 네트워크 지원 확대를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다양한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